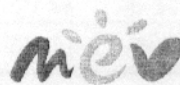


협 의 자 료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추진방안

2008.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추진 배경

- 최근 반환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정화 문제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국방부는 '08년부터 23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3년간)
- 해당 지자체 및 시민단체는 국방부 정화사업 추진 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06~)
 - 지자체는 반환 기지를 매수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
- 환경부와 국방부는 환경오염 정화사업 전반에 걸쳐 정화수준, 지역사회 요구,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
 - 제17차 군관환경협의회('07.12.4)시 환경부에서 협의체 구성안 제안, 국방부 적극 수용
-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부기관, 이해당사자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결정

□ 추진 방향

- 유관기관 협의체는 국방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성
 - 사업계획 수립단계(1단계), 정화사업 추진단계(2단계) 및 사후관리단계(3단계)로 구분

※ 국방부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 계획(안)

단 계	내 용	'07	'08				'09년 이후
		4/4	1/4	2/4	3/4	4/4	
1	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설계					
2	정화 사업	오염정화 공사 실시					
3	사후 관리	정화 검증 및 관리					

주) 국방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자료(청와대, '07.11.21)

●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기관 현황**

순번	대표기관	세부 참여 기관	구분
1	환 경 부	토양지하수과, 군부대환경대책팀	중앙정부
2	국 방 부	환경보전팀, 국방시설본부, 육군본부	중앙정부
3	광역지자체	경기도, 강원도, (서울시)	지방정부
4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지역 시민단체	NGO
5	사업위탁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6	자문위원단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가	학 계
7	지역개발기관	반환 미군기지 개발업체 또는 기관	업 계
8	지역주민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거주민 대표	민 간

※ 서울시는 참여 의사가 불투명하여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참여 여부 결정

● **단계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형태**

- 1단계 : 정화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단계로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필요

○ 참여기관 : 환경부, 국방부, 광역지자체, 시민단체

- 2단계 : 정화사업 실시 단계로 1단계 협의체에 정화사업 위탁기관과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한 기술적 지원 필요

○ 참여기관 : 1단계 + 사업위탁기관, 자문위원단

- 3단계 : 정화사업 실시 후 사후관리 및 지역 개발단계로 개발관련 업체와 수혜자(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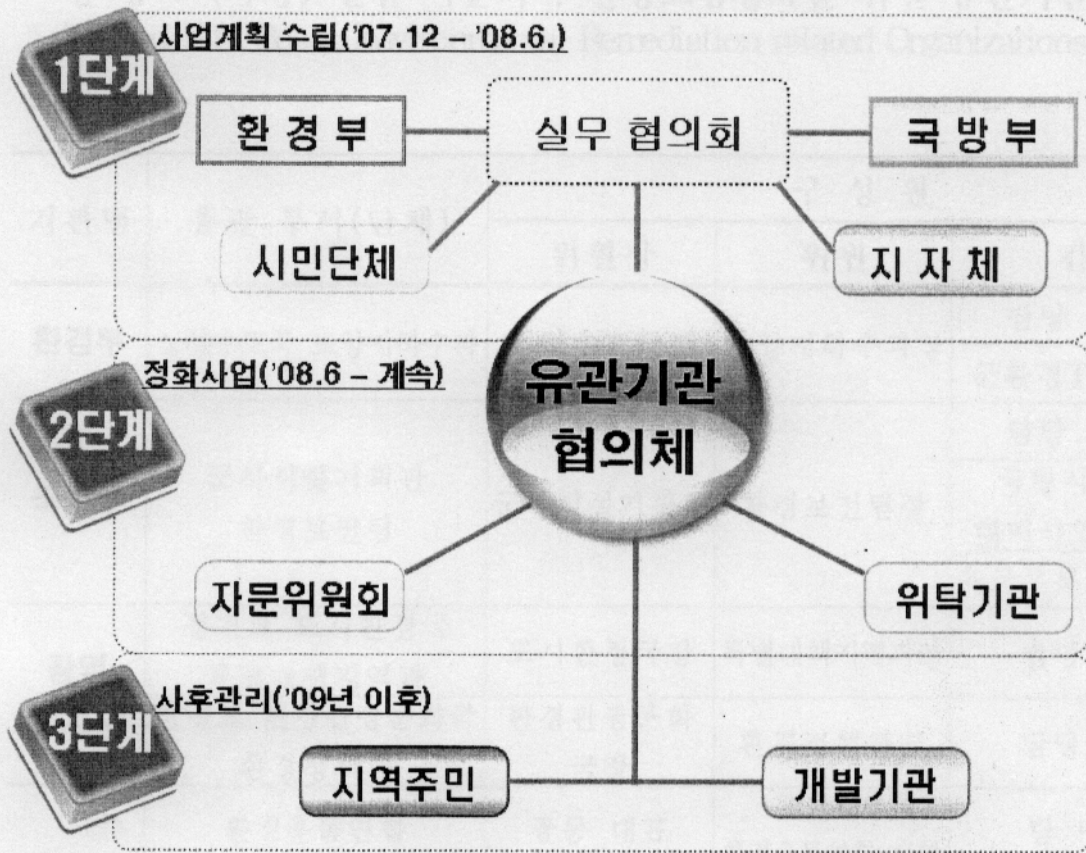
○ 참여기관 : 2단계 + 지역개발기관, 지역주민

● 1단계 유관기관 협의체를 우선 결성하되, **환경부와 국방부 실무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4개 유관기관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협의체 구성 방안 결정**

- 유관기관별 협의체 참여 범위, 주요 관심 사항 및 요구 사항 등을 기관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한 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 최종 확정

- 시민단체의 경우 대표 단체 외 지역 단체의 참여 범위 및 방법 등 결정

● 구성 체계(흐름도)



□ 1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방안

● 목적 및 필요성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대상의 대부분이 토양·지하수 오염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 할 환경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필요
- 환경오염 정화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정화수준, 부지 개발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 민·관·군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적인 정립
- 향후 반환 미군기지 뿐 아니라 국가 소유 부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협의 기구 설립을 위한 선례 및 토대 마련

● 구성 체계

- 명 칭 : (가칭)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Closed U.S. Bases Environmental Remediation related Organizations Council)

- 구성원

기관명	총괄 부서(단체)	구 성 원		
		위원장	위원	간사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상하수도국장	토양지하수과장	담당 사무관
				군환경TFT 담당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환경보전팀	군사시설기획관	환경보전팀장	담당 사무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팀 담당
				육군본부 환경담당
광역 지자체	경기도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	도시환경국장	특별대책지역과장	담당 계장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 환경정책과	환경관광문화 국장	환경정책과장	담당 계장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처장	담 당 자
	녹색연합	공동 대표	녹색사회국장	담 당 자
	해당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 해당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의 참여 조건 및 간사 자격 범위 등은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

● 구성 절차

- 제17차 군관환경협의회 제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 사안으로 추진 근거 확보
- 우리 추진방안을 토대로 국방부 환경보전팀과 협의를 통해 구성 체계 및 방안 구체화
- 환경부와 국방부 실무 담당자 간 추진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추진방안 내부 보고
- 정부측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최종 추진 방안 마련
- 최종 추진 방안 유관기관 내부 보고(장관, 도지사, 공동대표) 및 방안 확정

- 최종 합의된 추진 방안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4개 유관기관 간의 “(가칭)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위한 특별양해각서(MOU)” 체결
 - 4개 기관 위원장(각 부처 국장, 공동 대표) 서명
 - 협의체 구성의 목적, 범위 및 추진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최종 1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후 대외 홍보 실시(공동 보도자료)
- 구성 절차 흐름도

제17차 군관환경협의회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합의

환경부-국방부 실무 협의

- 협의체 구성 체계 및 추진방안 마련

유관기관 공동회의

- 광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 최종 추진 방안 확정

유관기관 특별양해각서 체결

- 4개 기관 위원장 서명
- 협의체 구성 체계 및 운영 방법 등 명문화

대외 홍보

- 공동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주요 안건(예상)

공동사항

- 해당 지역 중소 시민단체의 참여 범위 및 자격 부여 방안
- 2단계 및 3단계 유관기관 확대 참여 방식 및 제한 조건
- 협의회 의장 선정 방식 및 권한
- 의사 결정 단계 및 효력 여부 등

※ 상기 주요 안건은 유관기관 공동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광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 안건은 공동회의 결과 반영

□ 향후 추진 일정

- 추진 방안 세부 내용 실무 협의 및 조정('08.1.7~11)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국방부 환경보전팀
- 추진 방안(초안) 내부 보고('08.1.14~18)
- 유관기관 공동회의 개최 ('08.1.21~25)
 - 환경부, 국방부, 광역지자체 및 시민단체 대표 중심(환경부 주관)
- 4개 유관기관 특별양해각서 체결 ('08.1.28~31)
- 대외 홍보 및 유관기관 협의체 결성 ('08.2.1~)